

전북도의회 의정 중계서

“체육회 안정적 재정방안 마련을”

내년 1월부터 지자체장 등 도·시·군 체육회장직 겸직 금지 따라 성경찬 의원, 5분 발언서 “체육단체 예산지원 축소 등 우려” 표명

그동안 지자체장 또는 기초의원들이 당연직으로 맡아오던 각도·시·군체육회 회장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겸직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지역 체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는 선출직 공무원이 당연직 회장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 때마다 ‘지방체육회 등이 특정 후보의 선거조직으



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체육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정치와 체육의 분리원칙을 반영된 결과다.

2020년 1월 법 시행 이후 현직 지자체장과 기초의원 의원은 해당 체육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다. 전북도지사는 전북도체육회장, 고창군수는 고창군체육회장 등을 겸직할 수 없다는 의미다.

전북도의회 성경찬 의원(고창1)은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법 개정으로 체육의 독립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공

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체육단체 예산지원 축소 등의 부정적인 부분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자치단체장이 체육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행과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예산 규모도 천차만별이다.

이에 따라 체육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지자체장이면 체육회장 겸임에서 벗어난 순간부터 체육 관련 예산을 줄일 공산이 크고, 지자체장과 노선이 다른 인사가 체육회장에 선출될

경우 각종 어려움도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성경찬 의원은 “엘리트 스포츠의 뿌리 노릇을 해온 지자체 실업팀이 좋은 성적을 못 내고, 우수 선수도 영입할 수 없어 존재의 갈림길에 몰리면 그 여파는 대학 및 중·고교 체육으로 도미노처럼 이어질 것이다”며 “체육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체육단체의 안정적 재정 독립을 위한 전북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하고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1년간 흑사라도 벌여 질지 모르는 지자체별 체육 예산 삭감 대응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조직관리위원회 조례 제정... 전국 최초

도기구·정원 관리 위해... 송지용·국주영은 의원 공동발의

전북도의회가 전라북도 본청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광역시도 최초로 조직관리위원회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송지용 의원



국주영은 의원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원과 국주영은 의원이 12일 공동발의한 「전라북도 조직관리위원회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관리위

원을 둘 수 있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송지용 의원은 “정부정책과 연계한 전라북도 조직운영 정책 수립 등 전라북도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 에 따르면 기본인력계획의 수립, 전라북도 조직진단 등 정부정책과 연계한 전라북도 조직운영 정책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전북형 남북교류협력 체계 구축을”

박희자 의원, 5분 발언서 “민간 차원 문화·예술·체육 교류부터 시작해야”

남북관계 해빙의 시대를 맞아 전라북도 전라북도 교육청이 ‘전북형 남북교류협력’을 선제적으로 대비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전북형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해 도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희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12일 제



360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의 급변에 따라 체계적·장기적인 전북형 남북교류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남북관계에 대응할 수 있는 교류협력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면, 전북형 민·관·학 연계 신 남북교류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주장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남북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미래의 한반도 구상과 통일 구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방침에 서울·인천·경기

도·강원도 등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남북협력사업 발굴과 민간교류 활성화 지원, 남북교류의 체계적인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교육청이 한반도 평화발전과 교류협력이 이뤄지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민간 차원 문화·예술·체육 교류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문화는 모든 것이 희로애락이 묻어 있어 이념을 초월하고, 스포츠는 승부를 가리지만 승자도 패자도 함께 어

깨동무 하며 다음을 약속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북형 남북교육교류협력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단체 신채호 선생의 말을 빌려 “우리 과거의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면서 “지난 과거의 잘못된 교육사관을 남북이 교류하면서 바로 잡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희자 의원은 “작은 노력이라도 끊임없이 계속하면 큰일을 해낸다는 승거담단 수직석천(繩梯木斷 水薄石穿)의 중국 사자성이 있다”면서 “이에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지역사회 통일기반 조성활동을 지속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와 교육청의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와 정책 개발로 이어져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정동영 “라뎀 방출 원인 건축자재 사용 금지해야”

라돈방지 2법 발의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전국 각지에서 속출하고 있는 라돈 문제 해결을 위해 라돈 방출의 원인이 되는 라뎀 함유 건축자재 사용을 규제하는 ‘라돈방지 2법’을 발의했다.



정동영 대표는 12일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천연 방사성 물질로 우리나라 폐암 사망자의 12.6%가 실내 라돈으로 인한 폐암 발병으로 사망했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라돈 방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라뎀 함유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라돈방지 2법(주택법·실내공기질관리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가 대표발의한 ‘라돈방지 2법’은 라돈 방출량이 아닌 라뎀 함유량을 기준으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 대표는 “라돈 방출량은 조사 시기와 방식에 따라 결과 값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있고, 이에 스웨덴이나 체코 등 일부 유럽국가는 라돈 방

출의 원인이 되는 라뎀을 일정 기준 이상 함유하고 있는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일정 기준 이상의 라뎀이 함유된 콘크리트 제품, 건설용 석제품 등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택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 해법”이라 주장했다.

한편 정동영 대표 관계자에 따르면 정 대표는 작년 전주시 송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라돈이 검출되자 아파트 시공사 대표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여 ‘집면 교체’ 결정을 이끌어냈으며, 이후 전국 곳곳에서 라돈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하자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대표는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라돈이 검출되면서 ‘나도 갑작스러운 폐암 발병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라돈 공포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면서 “저 정동영과 민주평화당은 라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라돈방지 2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성 기자

“향토음식에 대한 지원 늘려 관광자원화 해야”

김이재 의원, 5분 발언서 “도, 14개 시군과 머리 맞대 적어도 1개 이상 개발을”

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 4)이 12일, 열린 제36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향토음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관광



자원화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이재 의원은 “관광과정의 하나로만 여겨졌던 음식이 주 관광활동의 대상으로 대두되면서 음식관광 시장이 전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고, 국내 지역관광에서도 음식은 관광콘텐츠로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전라북도의 경우 자치단체들과 음식점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향토음식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점점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고, 심지어 어떤 시군은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업소가 한곳도 없는 실정”이라며 “향토음식 관광자원화를 위해 14개 시군과 머리를 맞대어 적어도 시군별로 차별화된 1개 이상의 대표적인 향토음식들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한편, 홍보효과를 위해 광역차원의 음식가이드북 제작(맛지도), 전북투어패스와의 적극적인 연계 노력, 향토음식심의회의 내실 있는 운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